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7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1.

복지문화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1. 1. 28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복지정책과장)
- 제출일자: 2021. 1. 14.
- 회부일자: 2021. 1. 15.
- 검토기간: 2021. 1. 15. ~ 2021. 1. 25.

2. 제안이유

- 가.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흐름에 맞추어 주거취약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상향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
- 나. 달서구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주거문제 상담 및 서비스연계를 통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 하고자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2 및 제4조3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:

가. 시설개요

- 명 칭: 「달서주거복지센터」
- 장 소: 월성2주공아파트 상가 301호(월성로 77)
※ 송현동 든들C센터로 이전 시까지 임시 사용(무상임대)
- 시설규모: 209m²(사무실1, 상담실1, 교육장1, 집수리 물품창고1)

시 설 명	용 도	면 적	비 고
달서주거복지센터	계	209m ²	
	사무실	60m ²	
	상담실	20m ²	
	교육장	89m ²	
	집수리 물품창고	40m ²	

나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: 3년
- 운영방법: 민간위탁(주거복지 전문기관)
※ 공개모집,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
- 위탁사무
 - 주거복지 상담·정보제공 및 사례관리
 - 임대주택 등의 입주, 운영,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
 -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 -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
 -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
 -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4. 검토의견

- 본 의안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(이하 ‘위탁조례’)」에 따라 ‘주거복지센터’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해 의회로부터 사전(事前) 동의(同意)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.

○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¹⁾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(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)”바, 따라서 집행부는 현 「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먼저 의회로부터 위탁 동의를 받은 후, 위탁 예산 과목(#307-05)을 계상(편성)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.

- 일부에서는 위 「민간위탁 조례」가 아닌, 센터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「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(별첨)」를 상기 <지방재정법>에서 말하는 “~조례~” 범주로 해석, 위탁 예산(#307-05)을 편성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제기.
- 동 주장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(別論)으로 하더라도, 의회 제출 예산안에서 집행부가 예산 성격을 <위탁 예산(#307-05)>으로 계상(편성)²⁾한 것은 위 “~위탁할 수 있다.” 조문을 “~위탁한다. (위탁해야 한다)”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립 불가능한 사항. 이는 법령 해석의 오류(誤謬)로 결국 위 <지방재정법>에서 규정한 “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”를 벗어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의회는 위 <위탁 예산(#307-05)>예산을 승인(承認)하였음. 그러나 예산을 승인하였다 하여 이를 동 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의회가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.

1) 여기서 ‘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’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,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. ([대법원 판례 2013. 1. 16., 선고, 2012추84, 판결] 중)

2) 2020년 12월, 집행부는 <2021회계연도 예산안>에서 <위탁 예산(#307-05) : 1억 5천만 원>을 편성

○ 이처럼 집행부가 위탁 예산안은 작년(2020년) 12월에, 위탁 동의안은 금번(2021년) 1월에 의회에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절차적 위배 여부에 대한 논란을 집행부 스스로 야기함.

○ 현 상황에서 동 동의안 처리에 대한 의회의 선택지는 크게 【 ① 동의 ② 부동의 ③ 의결 보류】 3가지임.

- ① 동의하면, 절차 위배 여부 논란³⁾이 재연(再演)될 우려.
- ② 부동의하면, 이전의 예산 의결 행위에 대한 번복 논란 우려
- ③ 의결 보류하면, 의결된 예산의 집행 보류로 인한 논란 우려 있음.

※ 참고 : <부동의> 또는 <의결 보류>되면,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.

○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일련의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먼저 청취한 후, 이를 기반으로 본 동의안의 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함이 절차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

3) 절차 위배 우려 해소되지 않은 채 의결된 위원회 의결 사항은 향후 본회의에서 다시 절차적 공정성 여부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,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한 의결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 재의(再議) 요구를 할 수 있음.

【관련 법규】

【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복지센터 지원 조례】

제14조(주거복지센터 설치)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거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6조(관리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·인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센터 설치·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【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】

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(이하 생략)